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1급 발암물질 2년간 방치

박수기, 시·광산구 지하수 관리 질타
“기준치 466배 초과…알고도 방치”
광주시 “광산구 책임…대응책 마련”
광산구 “관리 미흡 죄송” 사과문 발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최대 466배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광주시와 광산구가 2년 가까이 이 사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책임 회피와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1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주거지역 인근 지하수에서까지 검출됐지만 광주시와 광산구는 아무런 조치 없이 시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해당 오염 사실은 2023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역 보고서로 확인됐음에도 시와 구는 이후 2년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가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내려보내 광산구가 용역을 시행한 만큼, 총괄 권한과 책임은 시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사안은 단순 환경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된 긴급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사안의 관리·책임은 광산구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하수 개발허가와 오염 방지 명령 등 실질적 권한은 구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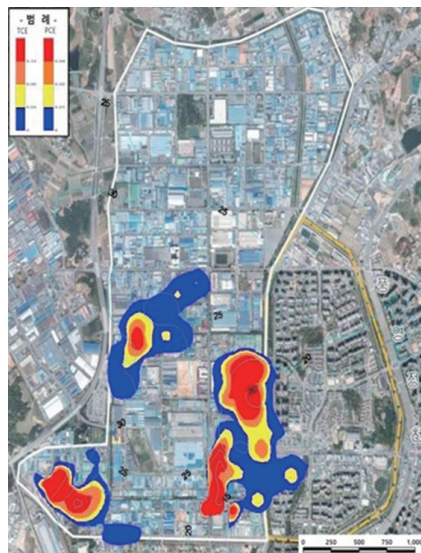
광주시의회 박수기 시의원이 1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하남산업단지 지하수 발암물질과 관련해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있다. 시는 10억원의 예산을 광산구에 보조했을 뿐, 공식적인 최종보고서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2024년 광산구가 정산을 위해 시를 방문했을 때 보고 책자를 받긴했으나 오염 처리 계획을 포함한 최종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시가 소극적이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지하수 관리 권한은 광산구에 있다”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였던 만큼 대응이 미진했을 수 있으나 늦었지만 구청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암물질 지하수로 인한 주거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남산단 내 지하수 87곳 중 수완지구 장덕동에 가까운 지점 25곳 가운데 1곳만이 민방위용 음용수로 사용 중이며 최근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와 비음용수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광주시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한 주체이자 예산을 집행한 책임기관으로서 결과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수조사와 긴급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 위험성이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오염 분포도.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관정을 폐쇄하고 정화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관계자는 “지하수는 생활밀집형 자원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자치구(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며 “다만, 지하수 오염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위급성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광주시도 자치구와 함께 단기·장기적 구제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기정 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공개 사과와 긴급 조치를 요구했다. 김선미 환경위원장장은 “광주시와 광산구가 오염 사

실을 알면서도 2년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시민을 방치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주엽 시장위원장도 “생활용 지하수 관정을 즉시 중단하고 대체 수돗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정화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박 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2023년 하남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광산구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시민들께 이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소홀했다”며 “근로자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TF를 꾸리고, 수완지구 내 187개소 지하수에 대해 이달 안에 전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며 “행정 책임과 절차 지연의 경위를 감찰하고, 조사 결과와 대응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9년 ‘지하수 관리계획(2019~2028)’을 수립해 환경부 승인을 받았으며 하남산단 일대를 포함한 지역 지하수·토양에 대해 정밀조사를 추진해 왔다.

시는 북구와 광산구에 총 12억원 이상을 지원했고, 2023년 12월에는 유출지하수 관리계획도 별도로 수립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41개소 현장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특검 “尹 강제 구인 불발… 다양한 조사 검토”

서울구치소, 물리력 동원에 난색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는 특검팀 지휘에 서울구치소가 난색을 보이면서다.

특검팀은 추가 출석 통



지 대신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육중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도록

하라고 구치소에 내린 지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정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며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휘 불이행 경위를 파악한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서울구치소는 여전히 지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구속기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육중 조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

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사이드를 더하다

사실에 통찰을, 정보에 취향을 더했습니다.
뉴스 위에 독자를 더하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The JoongAng Plus에서 만나보세요.

The JoongAng **Plus**

더중앙플러스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확인해주세요

새로운 **인사이트**

큐레이션

독창적인 **관점**

PDF 다운로드
혁신과 도전의 통찰
AI 시대, 뉴스 미디어의 미래
3 / 5

새로 나온
FREE
더보기 >